

도, 국가예산 확보 박차

김종훈 경제부지사,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만나 현안 반영 설득

전북도가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원상회복을 비롯한 도정 주요 핵심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연일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주 김관영 지사가 양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소위 의원 등 국회 핵심 인사 방문 활동을 한 데 이어, 14~15일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예산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고, 월요일부터 사실상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관가하는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예산심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핵심 인사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먼저 예결소위 위원으로 전북 예산확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원택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상임위 예산심사 진행 상황과 향후 예결위 심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각 분야별 핵심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했다.

특히,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직접 만나 새만금 사업 외에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예산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먼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서삼석 예결위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현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이차전지 R&D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 6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10개 핵심사업의 예산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기재부의 이해와 동의를

중요해지고 있어, 김 부지사는 주요 예산과정을 만나 전북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설득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가려져, 자칫 놓칠 수 있는 전북 산업 분야 주요 예산도 관련 국회의원과 부처를 찾아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 예산뿐만 아니라, 기재부 삭감, 부처 미반영, 지역 현안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역균형발전 시작”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과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의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이며 그 시작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안

정적인 출범에 있기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님들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국어사용 촉진

진흥 조례안 수정 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진)이 발의한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와 군산시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군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국어발전 시행계획 및 국어책임관에 관한 사항, 공문서 등의 작성·정책 등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와 관련된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사항, 국어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관문 기자



“정신건강협력 증진사업 실적 ‘저조’”

이병철 도의원,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군산·김제·부안 자살사망률 타 지역보다 높아”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5일 진행된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건강증진 관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반면 군산의료원 진료권역(군산·부안·김제 등)의 자살사망률과 스트레스인자들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포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보건·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을 포함한 총 6개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이 목표치를 넘어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는 반면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만이 60%대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

고 있고, 이는 2022년 55%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살 사망률(표준화율)'에서 김제시가 인구 10만 명당 36.4명으로 14개 시군 중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안군은 26.4명으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군산시(24.2명)는 전북 평균(24.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도 14개 시군 중 김제시(31.0%)가 가장 높았고, 군산시의 부안군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김제, 부안, 군산 지역의 정신건강 수준이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을 군산의료원 측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군산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의료 공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서 지역 내 의료안전망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15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북'이 열린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김관영 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지방소멸 극복 머리 맞대다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북' 성료

골목상권 육성·로컬 브랜드 성공 사례 짚어

전북CBS가 인구 정책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15일 전북CBS가 마련하고 보전복지부, 전북도, 전북대가 함께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북'이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로컬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지방인구 감소와 전라북도 대응'에 대한 기조발제를 맡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매년 8,000명의 청년이 취업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차전지와 방산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게 됐다"며 "투자 예정액이 8조원에 달하고, 향후 5년 동안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골목상권으로 탈출하는 지방소멸 위기', 크림톤 양경준 대표가 '투자펀드로 만드는 로컬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모 교수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 홍대와 가로수길, 전주 한옥마을 등에 형성된 골목상권 육성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과 질의 답변에 이어 (주)지방조력능 대표, (주)프루터이 설치회 대표가 각각 '군산: 지역관리로 회복하는 로컬의 활기', '전주: 로

컬자원으로 만드는 로컬 브랜드' 등 지방소멸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조 대표와 설 대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성공 사례를 짚었다.

이날 포럼장에는 전주 '잘익은 언어들'·'FROM HERE', 완주 '솔로:작', 김제 '전라동화 유랑단', 고창 '멍가달라' 등 로컬 브랜드 생산품 판매장이 마련됐다.

김용완 전북CBS 대표는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장벽 앞에서 절박한 시기에 전북CBS 인구포럼이 열렸다. 정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설정을 계기로 지역 인구가 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방공무원 단순·직업병 건강 이상자 늘어”

염영선 도의원, 전북소방본부 행감서 “본부 차원서 대응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5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단순 건강 이상과 직업병 건강 이상을 잘 살펴보고, 건강 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단순 건강이상자가 2022년 2,431명으로 2021년 1,794명 대비 637명(35.5%)이 증가하였고, 직업병 건강이상자가 2022년 1,281명으로 2021년 820명 대비 461명(56.2%)이 증가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은 "단순히 건강검진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에 대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행감·내년 예산안 심사

고창군의회의회(의장 임정호)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간다.

제2차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도 부서별 시책업무 보고와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부서별 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되어 운영위원회는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안'과 차남준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진료권역 내 기관들과 협약 체결 확대해야”

강동화 도의원,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5일 진행된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군산의료원의 기관 간 상호협약 체결이 주로 군산 지역에만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김제, 부안 등을 포함한 진료권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협약 체결 확대를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이 2023년에 상호협약을 체결한 17곳 기관 모두 군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9곳과 상호협약을 맺었고 이 중 6곳(32%)이 군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곳 중 4곳이 전북도가 아닌 충남 서천군 소재 기관으로 나타나, 진료 협약이나 공공의료의 혜택에

서 상대적으로 김제나 부안지역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화 의원은 "군산의료원은 지역 사회 내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맺어왔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군산의료원의 진료권역인 김제나 부안 지역이 기관 간 상호협약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군산의료원은 군산 지역민의 의료원이 아닌 김제, 부안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 내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심기관이므로 앞으로 지역 기관과의 상호협약 시 지역적인 인배에도 신경을 써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